"신해양·문화관광·친환경 수도 전남 반드시 실현"

대신협 자치분권 대상 김영록 전남지사

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주관 제4회 자치분권 대상을 수상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"처음 정치 에 뛰어들 때 농어촌 지역이 제대로 대접받고, 전국 어디서나 잘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소명의식이 있었다"며 "전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, 교육·문화, 출산·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선도하는 등 자치분권, 국가균형발전에 힘써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김 지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서면 인터뷰 등을 통해 "지방은 지 방이 제일 잘 알고 있다"면서 "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"며 이 같이

김 지사는 특히 "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 제시한 개념이 범 수도권 패러다임에 서 나아간 제3수도 건설이다"며 "경제수도 서울, 행정수도 세종에 이어 한반도의 최남단에 '신해 양·문화관광·친환경 수도 전남'을 건설해야 한다"고 역설했다.

-제4회 자치분권 대상 수상 소감은.

▲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상 중에서 가장 영광 스럽고, 또 가장 많은 축하를 받은 것 같다. 매일 아침마다 8시 40분이면 대변인이 지방 신문에 나온 기사 등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는데, 배우는 것이 많고 도정에도 큰 도움과 힘이 되고 있다.

지방소멸 위기 이런 말들을 쓰는데, 우리가 그 만큼 지역 발전, 지방에 대해 크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.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

먼저,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. 반 도체, 우주항공, 데이터 등 30조원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 다. 지난해에만 10조원대 투자유치로 7,425개 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졌다. 올 상반기, 체계 적인 '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' 을 세워 농협·수 협중앙회, 공항공사, 난방공사 등 전남이 비교우 위를 가진 핵심 공공기관을 반드시 지역에 유치

경제·행정 이은 '제3수도' 필요 '남해안 종합개발청' 설립 절실 중앙권한 과감하고 혁신적 이전

지방시대로의 대전환 선결과제



액션은 많이 부족하고, 가야 될 길도 멀다. 에너 지와 기후변화 등 많은 부분에서 대전환이 이뤄 져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지방 시대로의 대전환 이 정말 중요하다. 산업화, 민주화만큼 중요하다 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방발전,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.

큰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.

▲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비수도권 청년 이 매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떠나기 때문이다. 전국 공통으로 양질의 일자리, 교육·문화, 출산 ·양육 등 문제를 안고 있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이 선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.

전남의 경우 유출 인구의 8할이 청년으로, 이 를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.

둘째, 교육·문화다. 전남도는 지난해 한국에 너지공대를 열었고, 지역 인재를 위한 국제고도 유치할 계획이다. 지난 2월 출범한 호남 청년 아 카데미를 기반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 리더 1,200명을 키우겠다.

셋째,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해 걱정 없이 아 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 -지방소멸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. 가장 하다. 아이들을 걱정없이 키우시도록 공공산후 조리원 3곳을 추가로 짓고, 농어촌 지역 교통복 지에도 힘써나가겠다.

> 저는 행정가,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수도권은 점점 낙후되고, 특히 전남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 실을 목도하며 문제의식을 느껴왔다. 처음 정치 에 뛰어들 때 농어촌 지역이 제대로 대접받고 전 국 어디서나 잘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소명 의식 도 있었다. 앞으로도 자치분권, 국가균형발전에

힘써나갈 것을 약속드린다.

-지방에서는 지방자치를 위한 권한이 없다고 아우성이다. 절실히 이전이 요구되는 것은.

▲지방은 지방이 제일 잘 알고 있다. 중앙정부 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것만 맡고 지자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지방으로의 과감 하고 혁신적 권한 이전이 필요하다.

민선 7기 당시 제가 발로 뛴 결과 재정분권 2 단계를 시행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고, 약 3조원의 국고 예산을 확보했다. 인구감소 지역을 돕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키우는 것은 물론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한 지방소 비세 배분방식을 개선하고, 지방교부세 법정률 을 높여야 한다.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 민생 경제와 환경관리 등 실제로 지방행정을 수행하

므로 지자체로 이관돼야 한다. 지방중소벤처기 업청, 지방환경청, 지방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사무·인력·예산을 지자체에 한꺼번 에 넘겨줘야 한다.

더불어 자치조직권도 보장, 확대돼야 한다.

-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한 비전과 현황은. ▲전남에서 경남,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은 수려하고 청정한 다도해와 소박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내륙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끌 잠재력을 가졌다. 전남도는 6,000 억원 규모의 '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'에서 한발짝 나아가 경남과 부산, 울산, 제주를 한데 묶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를 만드는 광역 관 광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. 그 결과, 내년부터 10년간(2024~2033) 전남·광주·부산·울산·경

남 등 5개 시·도를 아우르는 남해안권 최초 광역 관광 개발사업인 '남부권 사업'이 본격 추진된 다. 총 3조원 규모 남부권 사업은 역대 광역관광 개발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남해안 관광이 세계 로 웅비할 디딤돌이 될 것이다.

그 첫 발로 올해부터 해남·신안·구례·광양· 곡성에서 남부권 마중물 사업(55억 원)을 우선 시작한다.

-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, 지방시대 중심지 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 남해안에 세 번 째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.

▲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가 새로 제시한 개념이 범 수도권 패러다임에서 나 아간 제3수도 건설, 즉 '신해양·문화관광·친환 경 수도 전남'이다. 전남이 남해안의 중심이 돼 전북 · 제주와는 해상풍력 산업을, 경남과는 우주 산업, 부산·경남과는 탄성소재 산업 발전에 힘 을 쏟겠다는 계획이다.

경제수도 서울, 행정수도 세종에 이어 한반도 의 최남단에 '신해양·문화관광·친환경 수도 전 남'을건설해야한다.지역이스스로자립할 '경 제 선순환 구조'를 갖추고 획기적이고 과감한 권한이양, 지역 공약 이행으로 전남이 지방시대 를 열겠다는 원대한 포부다.

그첫 단추로 남해안을 종합 · 체계적으로 개발 할 '남해안 종합개발청' 이 꼭 설립돼야 한다. 전 남·부산·경남이 모여 '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 벨트 구축 상생협약'을 하고, 남해안권 정책협 의회 등으로 힘을 모았으나, 지자체만으로는 한 계가 뚜렷하다. 새만금개발청,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과 같이 남해안의 특색을 살릴 '남해안 개발 총괄 컨트롤타워'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.

-2022~2023 전남 방문의 해다. 굵직굵직한 메가 이벤트가 많이 열리는데.

▲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이자 한국 방 문의 해(2023~2024) 1년 차로 전남에서 굵직굵 직한 메가 이벤트가 많이 개최된다.

4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 로, 4월 영호남 화합 대축전, 9월 국제수묵비엔 날레가 열린다. 10월에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, 김대중 평화회의, 전남 최초 남도영화제가 열리 는 등 도내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. 특히 10월과 11월에는 도내 곳곳에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진행된다.

다양한 메가 이벤트를 품격있게 잘 준비해 전 남의 매력과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관광 객 1억명, 해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활짝 열 /정근산 기자





www_shb2b_kr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54(용봉동) FAX. 062-515-7878 E-MAIL. shsa9999@daum.net TEL. 062-511-0006